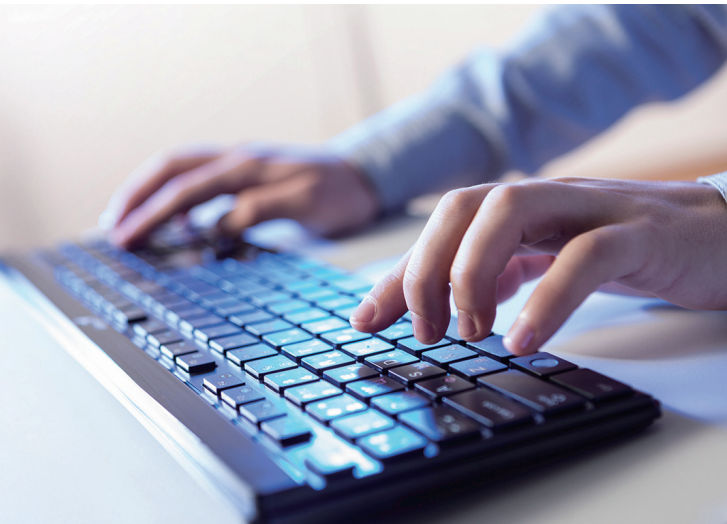


“기사를 빌미로 한 언론의 광고영업 행위 금지해 달라” 靑 청원 봇물



사회공익을 위해 써야 할 취재 권한을 매출 증진에 악용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취재 권한 남용을 금지시키자는 입법 제안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글은 게시된지 이틀만에 청원동의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청원글에 따르면 예전에는 큰 기업은 죽지 않는다는 ‘대마불사’란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언론불사’란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언론사업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만큼 언론이 공익적 역할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악의적 보도를 무기로 기업에게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언론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천개씩 늘어나는 인터넷매체 간의 생존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제안자는 “그 결과 기자들이 좋은 기사를 쓰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광고·협찬에 대한 기여도로 능력을 평가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자들과 편집국 인원의 광고·협찬 영업활동 금지법을 제안했다.

실제로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언론사의 취재기자들과 편집국 인원들이 광고/협찬 영업에 나서고 있다.

그 예로 ‘반론보도닷컴 사이버언론신고센터’에도 기업에 대한 악의적 보도나 부당한 광고 요구에 대한 신고가 매 분기마다 수십건씩 들어오고 있다. 한국광고주협회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 중인 유사언론실태조사에서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늘 90% 이상 나오고 있다.

또한 제안자는 “언론사의 악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에게 현실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했다. 사익을 위해 악의적 편집과 보도로 피해를 입히고도 언론은 정정보도로 갈음하며 배상금도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청원글에는 “(청원글도) 미화해서 올렸다. 현실은 더욱 더럽고 추잡스럽다. 동네 공사장 레미콘 아저씨한테 밥값으로 10만원을 뜯어내는 기자도 봤다”는 댓글이 달렸다. “점심에 일 때문에 보자 해서 나갔는데 부인까지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더라”는 댓글도 달렸다.

〈편집국 기자·부장 광고/협찬 영업활동 금지법〉 입법 청원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K A A 이명진 soziro01@kaa.or.kr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뉴스를
정책자료
국민소통 광
청 하 대

— 청원진행중 —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 세워 주세요 - 편집국 기
자/부장 광고/협찬 영업활동 금지 법

참여인원 : [569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시작 2018-07-17
청원마감 2018-08-16
청원인 naver-***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언론사 사주의 이익을 위한 취재권한 남용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요즘 대한민국 언론은 취재권한은 사회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매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언론인에게 취재권한을 준 것은 공익을 위한 취재를 하라고 준것이지,
언론사 사주와 언론사 매출을 위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한 때 큰 기업은 죽지않는다는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었지만